

#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3. .

발 의 자 : 이수련, 김지훈(국), 원주영,  
전혜연, 김상수, 박윤옥,  
박은경, 김지훈(민), 한근수,  
조성대, 김동훈, 이진환,  
정현미

## 1. 제안 이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3조)
- 나.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다.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사. 포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3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 5. 관련법령

가. 「청년기본법」

나. 「사회보장기본법」

##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서 사회진출 및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

담·교육·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운영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시장은 교육·복지·고용·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전

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1억 미만이며, 한시적 비용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최근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안양시 용역비 4천만원)
- 제8조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 파악 및 사업에 참여 여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2호
  - 연평균 1억미만이며 한시적 경비로 총3억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